추자도 여객선 운항중단 예고… 주민들 반발

3500t 산타모니카호 2022년부터 제주~추자~진도 운항
선사 측, 적자 이유 올해 12월 31일 운항 종료 통보
주민들 "1600명 고립 위기"… 도 "선사와 지속 협의"

제주 본섬과 추자도를 오가는 여객선 '산타모니카호' 운항이 올해 말 중단될 전망이다. 추자도 주민들은 "유일한 일일생활권을 이어주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1600명의 주민들이 고립 위기에 처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산타모니카호 선사에 운영계획 제출을 요청했고, 선사 측은 지난달 1일 적자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31일자로 운항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3500t 규모에 6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산타모니카호는 2022년 5월 취항 이후 제주~추자~진도 항로를 운항하며 추자도 주민들이 하루 만에 제주 본섬을 오갈 수 있게 해준 여객선이다. 현재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운항하는 송림블루오션호도 있지만 당일 왕복이 어려워 산타모니카호 운항이 중단되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추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선사에 결손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원금 19억5000만원 중 5억8000만원이 지원된 상태다. 도는 운항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운항 손실 보상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선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사 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적자가 65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추자항 접안 사고로 선박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운항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운항중단 계획을 공식 전달하기 전부터 해외 선박거래사이트에 산타모니카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타모니카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9일간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과 7월에도 선사와 운항 조건을 협상하며 운항을 이어왔다.



3일 오후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추자면 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가 추자도 여객선 운항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며 '모형 배 화형식·격파'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추자면 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추자도에서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제주도에 해상교통권 보장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선사의 운항중단 방침 철회와 함께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의료·문화·경제적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선사의 일방적인 운항 중단을 강력 규탄하며 행정당국은 대체 선박 투입과 운항 손실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운항 종료에 대비해 신규 사업자 공개모집 등 항로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운항 유지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에 해상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버린 약 상자에 남편이 남긴 현금 3000만원

약국 직원·경찰 도움으로
60대 아내 품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현금 3000만원을 분실한 줄도 몰랐던 아내가 하루 만에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이 약 상자 안에 현금 3000만원을 모아둔 사실을 모른 채 유품을 정리하다 버렸는데, 이를 발견한 약국 직원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추적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 30분쯤 제주시 아라파출소에 '현금 3000만원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습득자는 약국 직원이었다. 파출소에 직접 찾아 신고한 그는 "약 5시간 전 한 아주머니가 사망한 남편의 약 상자를 폐기해달라며 약국에 가져왔다"며 "약 상자를 정리하던 중 현금을 발견하게 됐다"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를 전해들은 동부서 형사당직팀은 단순한 분실금이 아닌 사연이 깊은 돈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주인 찾기에 나섰다.

경찰은 습득경위를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약 상자를 가져온 여성의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어 약 상자 안에 남아 있던 찢겨진 약 처방봉지에서 숨진 남편의 이름을 확인해 이를 토대로 약국을 찾았던 60대 여성을 찾아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약 상자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오랜 투병생활을 한 남편이 지병이 있기 전 택시운전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둔 돈인것 같다. 차곡차곡 모아 둔 남편의 돈을 저의 부주의로 분실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떠난 뒤 사는 게 팍팍하게 느껴졌는데,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을 찾아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농촌 체험 나선 어린이집 원아들 3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농경지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농촌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 예방 구체적 대응책을"

제주교총, 모의 대응 훈련 등 요구

제주 지역 교원 단체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지원 체계로 공정한 시험 관리와 교원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3일 입장문에서 "최근 대학별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고사장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물품 명시,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 자격 정지 기간 3년 확대 방안 추진 등 정부 대책이 부정행위를 막고 감독 교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책의 성패는 시도교육청이 시험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제주교총은 "스마트안경은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별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놓치거나,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을 잘못 의심해 시험장 분위기를 해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제주교총은 도교육청을 향해 ▷도내 모든 시험장 전담 인력과 감독관에 대한 사전 연수와 모의 대응 훈련 실시 ▷의심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식 등 시나리오별 공유 ▷시험장, 도교육청 상황실, 평가원으로 이어지는 비상연락체계 사전 점검 ▷민원·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과 직접 대응 ▷수험생·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 강화와 탐지 장비 확보 가능성 검토 등을 요구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는 8일 한라컨벤션센터서 제주 청소년 진로체험 축제

제주시가 오는 8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축제 '스마트 Jobs'를 개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주시청소년수련관과 13개 청소년문화의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운영된다.

행사장에는 AI 로봇과 드론을 비롯해 뷰티, 방송, 의료, 건축 등 미래 유망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16개 부스가 운영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제주한라대학교·제주폴리텍대학과 연계한 학과 체험 프로그램, VR 미래직업 체험도 진행돼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금탁기자

